

# 환경경찰과 환경관리인은 동반자

## 환경경찰

**환** 경경찰이 발족, 본격활동에 들어가자 환경행정력이 미처 못미친 사각지대까지 햇빛이 비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도둑! 강도! 폭력 등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는 경찰을 환경과 접목시켜낸 작명이 우선이채롭다.

환경경찰은 현재 환경오염이 국민들사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안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 조기에 이를 차단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어떻든 환경경찰은 이름이 풍기는 분위기에 걸맞는 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일단 갖게 한다.

특히 군복무를 대신하는 2천여명의 공익요원의 혈기왕성하고 원칙적인 사고방식과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에다 기존 3천여 환경공무원의 『능글맞은』 경험이 조화를 이룰경우 “큰 일을 낼것”이라는 기대를 훨씬 현실화 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혈기와 경험’이 조화된 환경경찰력은 그동안 해방감에 싸인 외판 배출업소에 분명 위협적 요인이 될 것이다.

재무장된 환경 행정력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이정운  
(일간보사 환경부 기자)

을 갖추고도 ‘뗏꾼’ 아끼려는 중대형사업장의 빛나간 환경관리에 적잖은 변화를 줄게 분명하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일반시민도 환경경찰은 남의 일이 될수 없다.

분명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의식없이 행해온 환경오염 행위들이 여지없이 단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셋강에서 세차를 하거나 금수강산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그리고 아무곳에서나 나무를 찍거나 몇마리 남지 않은 야생동물을 잡아들이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해도 될것같은 상수원에서의 가축을 놓아 기르거나 무분별한 행락행위도 예외없이 환경경찰의 지적을 받을 것이다.

현행 환경법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실수했거나 결과가 미치는 영향

이 작을 때는 벌금, 과징금을 물리는 것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유독물질을 배출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끼칠 때는 무기징역을 내릴수 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보다는 작은 오염행위는 작은대로 대형오염행위는 큰상태 그대로 항상 적발된다는 인식이 환경오염 제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경경찰, ‘그들은 크건 작건 환경오염이 있는 곳은 어디나 나타난다’라는 인식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환경경찰의 기능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공해제어에 효과가 있다.

## 환경관리인

환경관리인은 흔히 국가 환경보전의 첨병이라 불리워진다.

최일선에서 산업사회의 부산물을 거둬냄으로써 공기 물 토양 등 우리 공동재산을 지켜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승고한 기능’에 걸맞게 대우받은적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매년 실시하는 환경관리인연합회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관리인에 대한 자부심은 갈수록 떨어지고, 틈만나면 이직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

이 그것을 반증한다.

환경관리인의 고민은 그들이 국가환경보전이라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이 그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데서 출발한다.

조직인으로써 회사뜻이라는 '밥줄'과 법! 도덕의 '족쇄'사이를 하루에도 몇번씩 넘나든다.

비도덕적인 사업주 밑이라면 그 고통은 배가 된다.

그런라운드니 환경경영체제니 하는 국·내외 환경중시 경향이 태동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다.

종전처럼 환경관리를 자의적으로 하다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해를 당하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사업주가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짐은 단순 환경관리차원에서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지 회사 전체의 환경관리계획 즉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환경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적극적인 환경관리는 아직도 멀었다는게 일선 환경관리인들의 고백이고 보면 운신의 폭은 여전히 좁다.

기업내 환경관리인들의 불안한 위상은 「진급불만-작은이직-경협결여-환경사고」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공공재산에 부담을 준다.

이제 환경보전에 추후도 보탬이 되지않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겨져야 한다.

그것은 환경관리인들의 현위상이 정부나 기업주 등 외부적 요인

환경사고는 환경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싫어해서 업무도 미흡하고, 기업도 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관리인들은 정말로 잘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해기업으로 낙인찍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심지어 정부의 축정을 못 믿겠다고 우겨도 본다. 불신이 갈등관계를 증폭시켜온 셈이다.

탓이라는 피해의식에서 한시바삐 벗어나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환경관리 개선에 시도하고 더 나아가 기업 환경관리기획에도 참여를 시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이제 환경관리인은 국가환경보전의 첨병으로 제자리를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환경관리인과 일반인들

환경경찰과 환경관리인은 국가환경을 보전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한 배를 탄 동반자다.

그러나 법의 잣대를 두고 한쪽은 감시자요 다른 한쪽은 비감시자라는 점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반자임에도 갈등관계가 지속된 것은 그동안 서로간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사고는 환경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했고 동시에 몹시도 억울하며 그 화살을 기업 환경관리에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환경관리인들은 364일 잘하다 하루 실수 때문에 공해기업으로 낙인찍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심지어 정부의 축정을 못 믿겠다고 우겨도 본다. 불신이 갈등관계를 증폭시켜온 셈이다.

이제 누군가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환경동반자 관계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전국연합회가 중심축이 되어 펼치고 있는 '오염물질 10%줄이기 운동'은 신뢰회복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기본이고 기술! 경제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오염배출을 다소나마 줄이는 실천은 둘사이의 불신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환경관리인들은 스스로 자각을 위해 포스터도 만들고 결의대회도 열고 오염물질 줄이기 우수업체를 선정 격려도 한다니 이 운동에 믿음이 더욱 간다. 아무튼 이번 환경관리인들의 공해줄이기 운동이 참운동으로 전개되고 그성과가 정부당국에 그대로 각인되어 환경관리인에 대한 신뢰를 보태는 계기가 되기바란다.

환경관리인과 환경경찰이 진정한 동반자로 설때 나라의 쾌적한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담보되기 때문이다. ◀